

# 되풀이되는 학대 사망...입양아의 슬픈 잔혹사

### 해남 3세 아이 사망사건 이송 받고 1년 6개월 지나서야 능장 기소 검·경 또 다른 입양아 학대 확인하고도 2년 가까이 분리 조치 안해 경남경찰의 돌봄 요청 공문도 묵살...입양 절차·사후관리 강화해야

양부모에게 학대받은 4살 난 입양아에 관심을 두는 이는 없었다. 수사당국은 만 3세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養父母) (광주일보 11월 4일 6면) 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사는 만 4세 입양아의 신체적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도 2년 가까이 부모와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경찰은 해당 입양아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경남경찰청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결국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수사기관조차 관심을 주지 않으면서 만 4살짜리 입양아는 자신을 학대했던 양부모와 2년 가까이 불안한 동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양아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체계의 허점이 학대 아동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을 늦추게 하고, 같이 입양된 다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까지 늦어지게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도 불구속 수사를 받던 양모를 구속하긴 했지만 1년 6개월 만에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겨 '능장 기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광주지검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남경찰은 지난 2019년 4월 만 3세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양부모(養父母)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10월 11일 진주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하면서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에서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만 4세 입양아동에 대한 '돌봄'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다.

수사 과정에서 4살짜리 아동에 대한 양모의 신체적 학대행위 사실을 확인한 만큼 가해자의 추가 학대행위 발생 가능성을 우려,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례모니터링'을 요청했다는 게 경남경찰의 설명이다. 경남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모가 입양아동들에게 미성년자 사용 금지하는 약물인 졸피뎀(수면제)을 먹이려는가 하면, 나트륨을 과다 복용시킨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었다.

광주경찰은 그러나 적극적인 보호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지난 4월 해당 아동들에 대한 학대 혐의로 가해자인 양모를 구속하고, 법원이 지난 3일 재판에서 부인의 학대 행위를 유기·방임한 남편을 법정 구속할 때까지 분리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서로 떠

남기만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담당자는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일선 경찰서 담당이라 북부경찰 학대예방경찰관(APO)이 모든 관리, 분리 조치를 취한다"면서 "구체적인 사후관리는 북부경찰이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부경찰 담당자는 "아동보호전문기구로 권한이 넘어가기 전인 지난해 7월까지 규정과 절차에 맞게 모니터링은 진행했지만, 분리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도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시 북구가 지난 9월 검찰 의견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가해자와 피해아동간 분리조치를 시행한 점과 경찰 설명을 고려하면, 사후 모니터링을 했지만 '분리조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아동이 함께 살도록 내버려뒀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의 무관심한 업무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이 사건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혐의 등으로 누구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했을 경찰로서는 수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아동보호 전문가들도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보호조치 등이 없었던 소극적인 업무 행태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지검이 지난 2019년 10월 진주지청에서 관련 사건을 이송받은 뒤, 1년 6개월 만인 지난 5월 여야 가해자인 양부모를 재판에 넘긴 데 대해서도

더딘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검은 "영상 녹화, 법의학 감정, 디지털포렌식, 의학 자문 등 1년 6개월 동안 여러 수사 방법을 동원하느라 장기화됐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 내용을 넘겨받은 뒤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내도록 입증하기 위한 수사가 길어졌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영상녹화자료(CCTV) 분석,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 부검을 통해 드러난 졸피뎀 및 고나트륨 관련 수사와 법·의학적 감정 등에 대한 수사를 모두 거쳐서 검찰로 넘겼다는 경찰 입장을 고려하면 수사의 신속성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양절차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등이 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정서 조성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부분 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입양 절차와 사후 관리를 적법하게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매뉴얼대로 했다고 해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과정을 촘촘히 진단하고 입양과정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향후 입양으로 인한 피해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7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 9월 법원으로부터 피해 아동보호 명령과 임시 보호명령을 받아 해당 입양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법률 조언 해주고 돈 받은 현직 부장판사 징역형 구형

지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구형됐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 심리로 열린 A 부장판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A 판사에게 금품을 준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등 현직 법관으로서 A 판사의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A 판사는 지난 2017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진술서를 수정해주는 등 법률 조언을 해주고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함께 사업을 하던 공동 운영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뒤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인 A 판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A 판사 변호인은 사법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고 A 판사는 "면목 없다"고 진술했다. 선고는 오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사건 관련인들이 발언 기회를 요청하며 소란을 피워 퇴정 조치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청연한방병원장에 고리 사채 의혹 경찰관 2명 불송치·1명 내사 종결

경찰이 청연한방병원장에게 고리 사채를 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따르면 한방병원장 A씨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경찰관 총 3명 중 2명에 대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여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내사종결 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8일 사기혐의로 구속된 청연한방병원 A대표원장을 상대로 불법대부업을 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원장의 100억원대 사기 혐의 수사를 마친 이후 금융거래명세 자료를 토대로 그와 금전거래 한 경찰관을 전수 조사했다.

경찰은 통장거래내역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5년 이후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해당 경찰관들이 일반적인 금전거래 규모에 비해 다액인 수십억원대의 금전거래 규모를 확인했다.

이들 3명과 금전거래가 있었던 동료 직원과 민간인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금전거래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지인이나 모임원과의 무이자 거래가 다수였고 이자나 상환기한 약정이 없는 등 영업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안전문화 실천 이렇게 하세요" 4일 안전모니터봉사단 회원들이 전남대학교 후문 일원에서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주민행동요령 책자를 나눠주며 안전문화 실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최한배 기자 choi@kwangju.co.kr

###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

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시장은 부인과 아들이 소유한 땅에 도로가 개설되는가 하면, 측근 자녀가 부당하게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정 시장이 내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특

혜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시장은 혐의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광양시장과 정 시장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으며 공무원 등 30여 명을 조사했다.

혈액암 진단을 받은 정 시장은 지난 3월부터 병가를 내고 서울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당원 불법모집 정종제 전 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이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불법 모집해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1년·집행유예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은 4명 중 3명의 항소도 기각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선고는 유예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검찰의 '1심 형(刑)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 전 부시장 등 5명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등도 기각했다.

정 전 부시장은 제 21대 총선 광주 동남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권리당원 50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수사 중인 지난해 9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민주당 입당원서를 발견, 관련 수사를 이어갔고 정 전 부시장은 "위법 수집 증거로 인한 수사"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sup>2</sup>
- 건 물 : 411 m<sup>2</sup>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